

2014년 경제전망과 민선 6기의 경제산업정책 방향

글 · 안기돈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글 · 백운성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장

들어가며

2013년 KOSPI가 2000선을 돌파하며 우리나라 경제가 상승국면으로 접어들며,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경제성장률이 3%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직 경제 기반에 회복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하에서 한국경제가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인지 올해 경제성장률이 2.7%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2014년은 지난해보다 더 긍정적이다. 지난 몇 년간의 경제침체에서 이제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충남의 산업과 경제는 다가오는 2014년과 민선 6기의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충남의 중장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충남의 현재 산업과 미래의 산업정책에 대한 산업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고, 기업지원제도를 포함한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제도적 측면, 공간적 측면에 있어서의 지역개발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종합해 2014년도를 전망해보고 세 가지 측면에서 충남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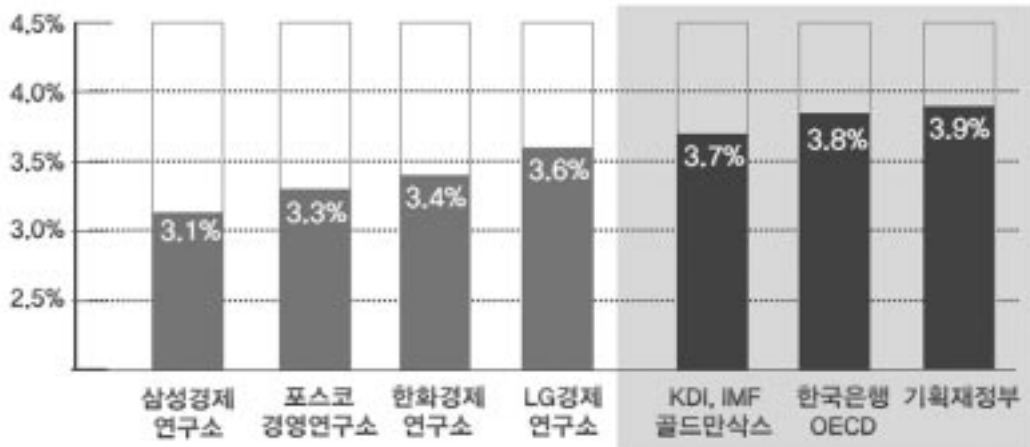
2014년 세계 및 국내 경제전망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부채축소 과정에서 나타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라는 뉴모럴(new moral)이 현재까지 지속되며 세계경제 전반의 경기회복세를 더디게 하였다. 그동안 세계 주요국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 투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경기 불확실성으로 실물경기까지 연결되지 못했다. 오히려 몇몇 선진국의 긴축정책으로 세계 교역까지 위축되어 신흥국의 경기둔화까지 연결되는 세계경제침체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2013년 상반기를 전환점으로 실물부문으로의 유동성 확대 등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축소와 아직도 쟁점이 남아 있는 재정협상,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의 경기회복 하방리스크도 함께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세계 주요기관들은 2014년 경제전망을 올해보다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OECD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3.1%, 2014년 4.0%로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유로지역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국채매입프로그램) 발표, 미국의 재정절벽 타결 등의 극단적 위험의 완화와 미국, 일본 등의 실물경기의 회복 등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역시 3.8%로 낙관적으로 제시했다.¹⁾ OECD는 2014년도에 세계 교역증대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수출이 전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따라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수출비중이 높은 만큼 세계경제 여건 및 최근 높아지는 환율변동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OECD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주요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후반대로 제시하고 있지만, 민간기업 연구소들은 3%초반의 보수적

[주요기관의 2014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많은 기관들이 2013년 경제성장률이 2012년(2%)보다 나아져 3%에 달할 것이라 했던 예상이 모두 빗나가 버린 후유증일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난 2008년 이후의 세계경제의 회복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는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기업들에 있어서도 실물경제의 회복 신호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역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 2013년 11월 19일 발표자료(OECD Economic Outlook)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013년 2.7%, 2014년 3.8%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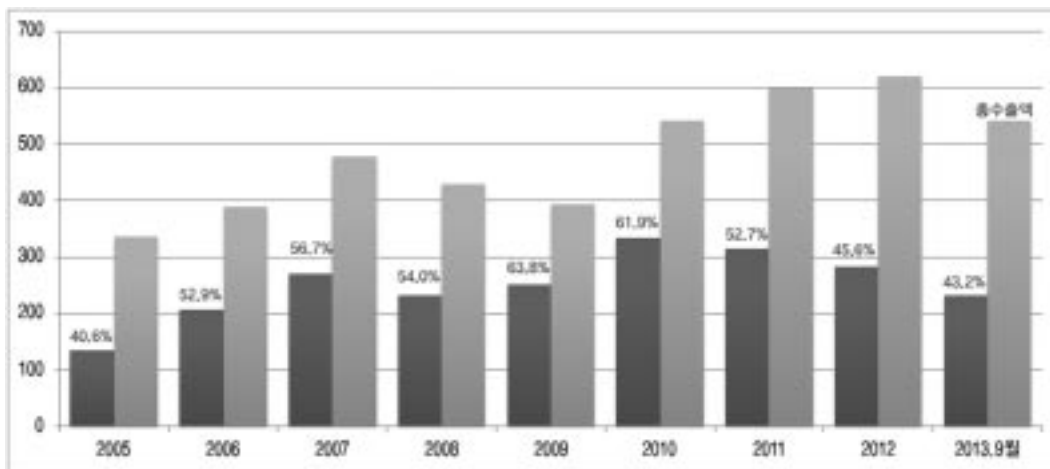
충남 경제의 주요 현안과 과제

그러면 이러한 세계 경제 환경의 조류 속에서 충남의 미래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경제와 산업분야로 국한한다면 산업의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해 깊이 논의할 수 있겠지만,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한다면 좀 더 폭 넓은 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충남에 대한 면밀한 접근,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에 대한 능동적 대응, 주변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나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이 그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현재의 산업에 대한 검토와 미래의 방향에 대한 제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대응차원의 검토, 마지막으로 지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코자 한다.

충남 주력기반 산업의 성장 동력 약화와 차세대 산업으로의 전환 기점

충남은 지난 2000년 이후 수출중심의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의 발달로 인해 지역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관련 기업이 집적화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 있어서는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 자동차(부품)산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단기간 충남의 산업이 IT기반 전자정보기기 산업 중심으로 변화된데는 세계 디스플레이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삼성, SMD, 삼성코닝 등)이 도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디스플레이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5년부터 살펴보면 충남의 총수출에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가 수출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과 2009년의 세계 경제위기에 있어서도 오히려 충남의 성장버팀목이 되어 왔다. 그러나 한때 충남 수출의 60%를 점유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에 있어 최근 들어 생산 및 점유율에 있어 감소폭을 키우고 있는데 두 품목을 구분하여 보면

[충남 총수출액과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와 반도체'의 수출비중]



몇 가지 특징을 뽑아낼 수 있다.

2011년부터 침체국면을 나타냈던 반도체가 다시 제1 수출품목으로 전환되었고, 2005년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던 디스플레이는 침체국면으로 접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이는 동남아시아의 저가패널의 생산 확대와 TV 등의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이 수요 약세로 돌아선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모바일 기기의 보급확대 등에 기인한 중소형패널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둔화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반도체는 그동안 과당경쟁에서 업체간 경쟁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 공장 화재에 따른 공급차질, 모바일용 메모리반도체 수요증가 등으로 가격상승세가 지속되며 수출이 다시금 호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충남의 주요 수출에 있어 전자응용기기와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모바일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충남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와 반도체의 수출변화]



결과적으로 현재의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산업이 당분간은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현 시점이 세계 주요국의 경쟁격화와 가격하락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산업 발굴이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발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산업(2차전지, 태양전지) 분야의 산업육성이 필요하며, 현재의 디스플레이 반도체기업의 산업생산체계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 역시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교류중심의 전력체계에서 태양열, 반도체 등의 직류

2) 충남 총수출 비중에 있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약세를 최근 급성정하고 있는 반도체, 전자응용기기와 무선통신기기가 대체하고 있다.

● 특집5 _ 충남의 민선 6기를 묻다

전원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전력산업의 육성도 충남소재 화력발전소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충남의 주력 수출업종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 외에 석유화학산업, 철강 및 자동차 산업 역시 그동안의 전통적인 제조기반에서 IT산업과 융·복합된 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즉, 과거 처럼 단순히 석유화학산업이나 철강산업 등의 자체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제품의 감성화·고급화 등에 기반한 고분자 유/무기하이브리드 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은 도청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충남은 리아시스해안, 갯벌, 국제무역항 등의 다양한 해양·항만 관련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관련 산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해양수산국 신설을 필두로 서해안시대의 항만·물류, 해양산업 등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중국과의 교류와 해양·레저산업의 성장이 급속화됨에 따라 충남의 자원을 극대화하는 “신해양산업”의 발전전략의 모색도 함께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 정책의 한계와 지방주도의 능동적 정책의 필요

최근의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산업정책의 재편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산업성장과정에 있어 충남은 수도권 규제로 인한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으로 충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의 이전이 가속화되어 왔던 지역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충남지역의 기업유치는 점차 둔화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도권 이전기업에 있어서는 더욱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충남의 기업유치 현황(수도권 이전기업 포함) 및 추이]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업체수	1,249,666	1,004	855	683	729	596
수도권 이전기업	736,501	378	292	200	92	69

※자료 : 충청남도 홈페이지, 수도권 이전기업 현황.

지난 민선 4기, 투자유치를 도정 최우선 목표로 공격적 기업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지만, 민선 5기에 있어서는 유치기업의 지역내 토착화 및 지역과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기업유치에 대한 목표보다는 유치기업에 대해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지역내 중소기업을 중견·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충남이 세계적인 산업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력기반산업과 연계된 전·후방 연관산업의 집적화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집적화는 바로 융·복합 산업이나 차세대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충남이 클러스터적 차원에서의 산업적 기반이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기업에 대한 내실화와 함께 국내 및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유치가 함께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은 최근 중앙정부의 지역투자촉진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도권과 밀 해소와 지방의 상생발전의 기반이었던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기업유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³⁾ 그동안 충남이 수도권 규제에 의한 반사이익으로 기업유치 등의 성장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시장에서 충남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큰 틀이 재편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시·도 전략산업육성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권별 산업을 육성하였으나, 다시 시·도 단위의 산업육성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현재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 산업정책에 있어 다시 시·도별 산업육성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광역경제권정책의 추진에 있어 시·도간 이해관계의 상충, 대기업 중심의 산업육성 등의 문제가 많이 노정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전환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도별 산업육성정책의 수립과 함께 광역권간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사업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정책 육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충남의 산업발전 기반이 경기남부, 대전·세종 전북북부와와 다각적인 연관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산업은 경기(파주, 화성, 수원) - 천안·아산 - 광주의 서해안 시도간의 연계협력이 중요하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대중국 시장의 성장에도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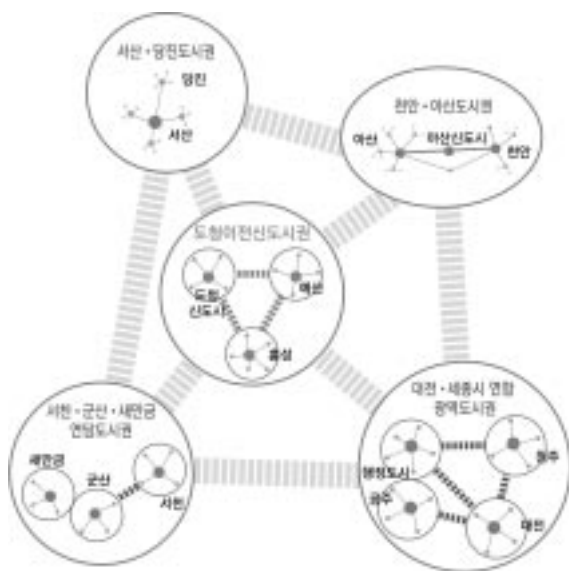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산업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차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 재정사정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충남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0%수준으로 사실상 산업이나 과학기술에 재원을 투자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사전기획에 있어 충남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며, 장기적으로는 산업관련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역차원에서 포괄보조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3) 정부는 지난 6월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투자촉진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공방안(기획재정부, 2013.6.3)"참조.

인접지역과의 네트워크와 동반성장의 필요

2012년 12월 충남도청이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충남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내포신도시⁴⁾로 이전했다. 이후 충남교육청과 경찰청이 이전하면서 점차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춰가고 있다. 그동안 충남은 “북부 지역”과 “그외 지역”으로 구분될 만큼 도내 지역간 심각한 경제력 격차가 크고, 현재도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⁵⁾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역시 북부지역의 발전된 여건을 내륙 및 남부지역으로 파급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여기에 있다.

[충남 주요 거점 도시권]



충남지역을 산업적, 기능적으로 지역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5개의 도시권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 먼저 북부권인 천안·아산과 서산·당진지역은 상호간의 산업적 연계도 활발하지만, 경기 남부의 평택·화성 등과의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논산·계룡·공주 등은 대전 및 세종지역과 소비권 등의 강한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다. 서천 등의 서남부지역은 전북 군산시와 연계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듯 충남의 각 지역들은 시군 자체적으로나 충남 내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닌 타 지역과 함

께 산업적 기능이 연계되고 소비 및 통근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내포신도시의 조성⁴⁾과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충남지역 공간구조에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2012년 7월 개청으로 충청남도에서 분리가 되었지만, 지리적·기능적으로 충남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산업지원 및 생활권 정책에 있어서도 행정구역별 분절적 정책이 아닌 상호협력적인 통합적 정책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더 넓게는 대전R&D특구, 충북의 오송·오창 산업단지와 연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볼 때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에는 아직까지 한계를 보이고 있

4) 내포신도시는 홍성군과 예산군 일부지역(9,950,521㎡)에 2020년까지 인구 10만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도청이전 신도시다.

5) 지역내총생산인 GRDP측면에 있어서 북부지역인 천안·아산·서산·당진이 충남 전체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인구에 있어서도 60%가 북부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다.

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협력을 통해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라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간 공동사업 추진조직 정비, 지자체간 다양한 행정협력제도의 도입 및 활용,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활용,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지역간 협력법/조례 제정 등의 지역간 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입지를 제외한 기업지원(장비, R&D, 연구인력 등)분야가 가장 협력이 가장 우선시되며, 장기적 차원에 있어서는 인접지역과 함께 산업 정책 및 입지정책의 큰 틀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하겠다.

나가며

2014년은 그동안의 경제침체에서 경기가 회복·상승되는 중요한 시점이며,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민선 6기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한해다. 충남의 경제 전망 역시 반도체산업과 관련 산업의 수출호조가 전망되고 있고, 다소 침체된 디스플레이 산업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충남은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세계경제의 소비가 살아나면, 지역경제는 그 이상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당장 내년, 내후년의 단기적 전망이 아닌 미래 충남의 경제를 위해 충청남도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우선 현재의 산업기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혀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산업기반에서 연계·발전할 수 있는 산업의 발굴과 정책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역 스스로 산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투자해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사업이나 정책을 유치하는 것은 차선책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발전과정상에 인접지역과의 연계와 통합적인 산업·행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2014년 6월, 보다 나은 충남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3.10
기획재정부, 지역투자촉진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2013.6
_____, OECD 경제전망 발표, 2013.11
백운성, 충청권의 경제·산업 현황, 한경비즈니스 제932호, Special Report, 2013
_____, 충남 경제성장의 특징과 향후 과제, 열린 충남 제55호, 충남발전연구원, 2011
삼성경제연구소, 2014년 경제전망, 2013.12
산업연구원, 2014년 산업전망, e-KIET 산업경제정보, 2013.11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7대 산업 경기의 특징과 2014년 산업전망), 2013.11
LG경제연구소, 2014년 국내외 경제전망, 2013.10
POSR 2014 경제·산업 전망, 2013.11